

민주, '국정원 수사' 사실상 전면전 선포

“원세훈·김용관 불구속, 수사개입 증거”

김한길 “황교안 법무 해임건의안 검토”

민주당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특히 검찰이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 개입의 결과”라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및 재정신청 카드를 꺼내드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전날 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광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압력 행사 의혹과 더불어 국정원 고위 간부들과 김 전 청장 간의 '직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이 강경 대응의 불을 댕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회견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추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 채 흔드는 반국가적 행위이자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가문란행위임에도 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질서를 가로막

고 있다”며 “황 장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묵살해왔을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는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한 뒤 “황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수사 개입에 대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기간 사이의 국가문란 담합 행위이자 두 개 정권을 이은 국가문란 계승사건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조사 후 국

정조사 불가피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기소를 결정할 데 대해 신경민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평가하지만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이 엄정한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황 장관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수사방해 공작으로 결정을 미루다가 검찰이 실기한 것은 매우 유감”

이라며 “이에 대해 황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원인 김현 의원도 “검찰이 구속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원전의 개입 및 수사추소 의혹이 명백해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적법치 않은 개입을 했다며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선거법·국정원법 위반...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국정원법 조항은 국정원장과 직원의 정치 관여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밝혀진 범죄 혐의 내용과 촉박한 공소시효 만료를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나머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에 일괄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선거법 성립 여부에 대한 증거 판단 및 법리가 어려운 사건이어서 보강조사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농어업 예산 삭감 철회해야”

민주 농수산물 의원들 “4년간 5조 감축 농어업 포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1일 박근혜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농업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가계부를 철회하고 후보자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 약속한 대로 농어업 소득 증대, 농어촌 복지,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어업 예산 확대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최규성·김영록·김승남·김우남·김춘진·박민수·배기운·황주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에 아랑곳없이 국민 복지 구현이라는 명분

로 농어업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삼으려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5월31일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과 140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소위 공약가계부 예산 134조8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수산분야 예산에서 내년부터 4년간 총 5조2000억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FTA체결과 비료·사료·인건비 등 생산비 폭등,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농어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농업 예산 삭감 계획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농민과 어민을 회유하려고 10년간 24조원을 지원하겠다고(박 대통령의) 약속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든 처사로, ‘농어업 포기선언’에 다를 아니다”며 “이명박정부 5년간 농어업의 기반을 뒤흔들더니 박근혜정부는 아예 농어업의 여린 싹조차 고사시키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세출구조조정 차원으로 농업 관련 예산을 2014년 8000억원, 2015년 1조 3000억, 2016년 1조 3000억, 2017년 1조 8000억 등 모두 5조2000억원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진보정치 혁신 실패 책임 통감”

심상정 의원 국회 대표연설...‘종북논란’ 반성도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보정치의 위기상황에 대해 통렬히 반성했다.

심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진보정치 최후의 시련기를 맞고 있다. 진보정치는 국민의 기대만큼 준비되지 못했고, 과거의 낡은 사고틀에 갇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했다”며 “진보정치 혁신에 실패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진보정당은 노동중심성 패러다임에 경도됐다는 비판, 대기업 정규직 정당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며 “근거있는 비판”이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심 원내대표는 ‘종북논란’을 의식한 듯 “진보정당은 안보불안세력이라는 불신이 널리 퍼져 있다”면서 “분단과 전쟁을 겪은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이념적 트라우마와 안보 불안을 깊이 주목하지 못했고, 이에 성실히 응답하지 못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진보정치가 고비를 겪을 때마다 ‘진보는 항상 옳은가’, ‘진

보는 더 민주적인가’에 대한 회의와 갈등이 있었다”면서 “민주주의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해 급기야 패권적 행태를 보이며 국민 불신을 자초한 사실은 진보정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성찰했다.

앞서 진보진영이 통합패 탄생한 통합진보당은 작년 19대 총선 때 국회의원 13명을 당선시키며 제3당으로 원내에 진출,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총선 이후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며 ‘종북 논란’에 휩싸이면서 갈등이 깊어져 결국 통합진보당은 통합진보당 잔류세력과 진보정의당으로 갈라섰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진보정의당은 6월16일 혁신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진보정의당은 그동안 새출발을 준비하기 위해 ‘제2의 창당’ 작업을 진행해왔다. 당명에서도 ‘진보’라는 표현을 뺄 방침이다. 새로운 당명으로는 ‘사회민주노동당(사민당)’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평가 라운지

장병완, 원전안전위원장 청문회 포함 추진

민주당은 11일 원전 비리를 계기로 국무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을 국

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자력안전 위원에 대한 결격 사유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곤, '세계 韓문화 주간' 제정 토론회

한민족 평화통일연대는 17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월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세계 한(韓)문화 주간'(The Korean Week)으로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 단체 이사장인 김성곤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왜곡 등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우리의 반만년 유구한 역사 인식을

명확히 하고 민족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주간 제정을 위해 법률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3년 10월 01일

굿모닝 메디컬 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에 탄생합니다!

굿모닝 스포테인먼트 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